

2015년 관세청 업무보고

2015. 1. 6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순 서

| | |
|-------------------------------------|----|
| I. 기관 현황 | 1 |
| II. 2014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 4 |
| III.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 9 |
| IV.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2 |
|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 13 | |
| 2. 한·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14 | |
| 3.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 15 | |
| 4.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 16 | |
| 5.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 / 17 | |
| 6.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 18 | |
| 7.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 19 | |



I. 기관현황

1

개정 : 1970. 8월,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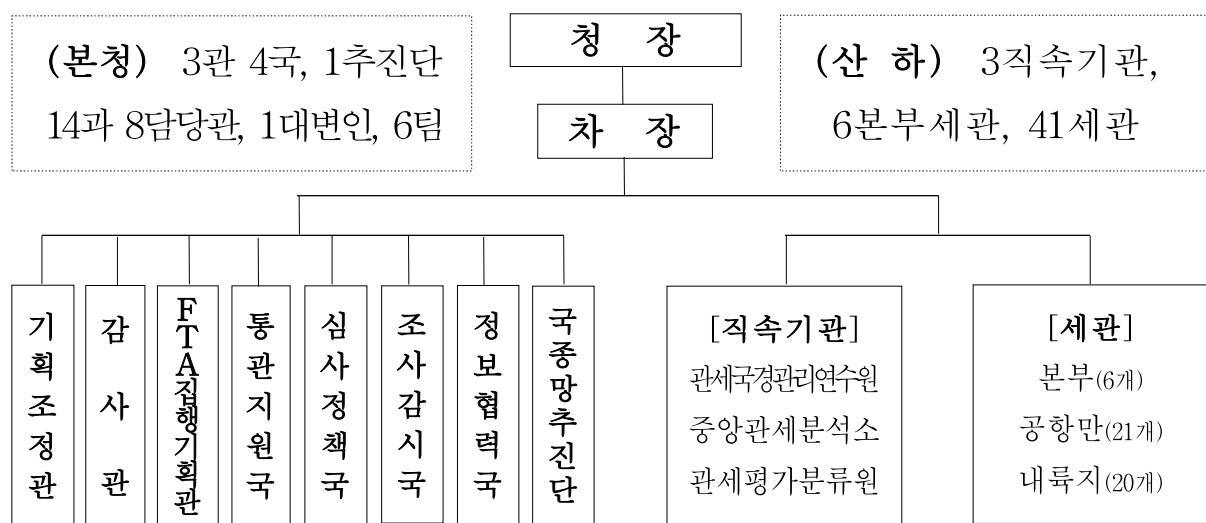
주요 기능

- ① 국가재정수입 확보
 - ② 국제무역 및 수출입물류 촉진
 - ③ 대외경제질서 확립
 - ④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 (통관지원국) 수출입화물·여행자 통관, 보세제도 등 물류 촉진
 - (심사정책국) 관세·부가세 등 징수, 관세조사, 과세 인프라 확충
 - (조사감시국)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감시·조사 장비 운영
 - (정보협력국)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국제 세관협력
 - (FTA집행기획관) FTA 활용율 제고 등 이행 지원, 원산지 검증

3

조 직



| | |
|------------|--|
| 본부세관(6) | 서울 · 인천공항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 공항만 세관(21) | 평택 · 속초 · 청주 · 김포 · 인천공항국제우편 · 김해 · 거제 · 마산 · 포항 · 울산 · 광양 · 목포 · 여수 · 군산 · 제주 · 동해 · 대산 · 고성 · 사천 · 부산국제우편 · 통영 |
| 내륙지 세관(20) | 안양 · 대전 · 천안 · 용당 · 양산 · 창원 · 수원 · 안산 · 구미 · 구로 · 성남 · 의정부 · 충주 · 파주 · 위주 · 사상 · 진주 · 부평 · 익산 · 전주 |

4**정 원**

('14.12월 말 기준)

| 구 분 | 계 | 본 청 | 본부세관 | 세관 | 직속기관 |
|-------|-------|-----|-------|-------|------|
| 계 | 4,594 | 357 | 2,731 | 1,362 | 144 |
| 5급 이상 | 366 | 118 | 133 | 96 | 19 |
| 6급 이하 | 4,228 | 239 | 2,598 | 1,266 | 125 |

* (성비) 남성 66.6%, 여성 33.4%

5**2015년 세출예산** : 4,814억 원*

| 인 건 비 | 기본경비 | 사업비 |
|---------------------|------------------|-------------------|
| 2,756억 원 (57.2%) | 287억 원 (6.0%) | 1,771억 (36.8%) |

* '14 세출예산 4,826억 원 대비 0.2% 감소

6**2015년 징세목표[잠정]** : 64.3조원* (總 국세 221.1조원 중 29.1%)

| 관 세 | 수입부가세 | 기타 내국세** |
|------------------|-------------------|-----------------|
| 9.9조원 (15.4%) | 48.4조원 (75.2%) | 6.0조원 (9.4%) |

* '14년 예산(68.1조원) 대비 5.7% 감소한 수준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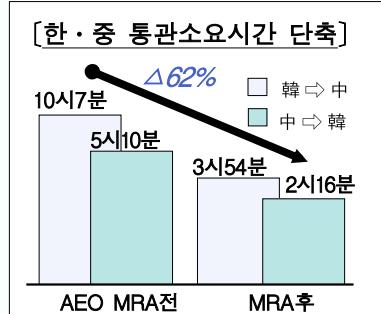


II. 2014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1 무역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 조성

- 양국 정상 임석하에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을 체결**('14.7월) 하여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 [5大협력] AEO MRA, 원산지, 무역통계, 불법단속, 인적교류
**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정상회담의 중요 성과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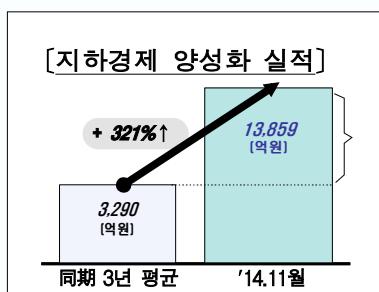


- 「YES-FTA센터」 신설 등 FTA 활용 촉진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원자재의 원활한 국내조달 지원
 - 수출기업의 FTA 활용율('14년말) ⇨ 한·미 76.1%, 한·EU 85.4%, 한·칠레 80.4%
- 수출입통관 과정의 인허가 및 절차상 규제(36개 법령 5,500여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기업에게 편리한 무역환경 구축
 - AEO 등 차등적용 세관장 확인 생략건수(감축비율) : 3,630건(5.2%)

2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가재정 뒷받침

- 환율하락, 수입둔화 등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 확보*에 조직역량 집중

* 65.5조원(전체 국세목표 201.9조원 중 32.4%) 재정조달



- 관세행정 기능·인력 재배치* 등 과세 인프라 확충 및 탈세 차단에 주력하여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 농산물심사 전담팀 신설(2.24), 이전가격 전담팀 확대(3.17), 공인회계사 특별채용(10.15)

** 공약가계부 기준(순증) 총 1.1조원을 확보하여, 목표(1.1조원) 달성 완수

- 수출입 실거래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로 공공재원(국고·국책은행)을 빼돌리는 비정상적 관행 집중 단속* 및 손실자금 회수 추진

* 7천억원대 국책은행 손실을 입힌 벤처기업(M社) 위장수출(3조원 상당) 검거('14.10)

③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대상으로 성실무역업체(AEO) 지정* 및 면세점 사업 진출을 확대**

* [중소 성실무역업체(AEO)] ('13) 14개 ⇌ ('14) 35개

** [출국장 중소중견 면세점] ('13) 1개 ⇌ ('14) 6개

- 중소기업의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납기연장·분납 등 세정 지원 강화

-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Job-Matching으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중소기업의 FTA 활용단계에 따라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

| 지원내용 | 지원실적 |
|--------------------|------------------|
| 납기연장·분할납부 | 124업체, 271억원 |
|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등 환급지원 | 3,839업체, 2,784억원 |
| 신용정보제공 유예 | 171명, 257억원 |
| 체납자 통관 허용 | 1,293명, 491억원 |

④ 소비자권익 보호 및 민생 안정

- 병행수입물품 세관인증 문턱을 낮추고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생활 소비재* 위주로 개선하는 등 수입물품의 가격경쟁 촉진**

* 1차 공개(4.8) : 생수, 치즈, 와인등 10개 // 2차 공개(12.5) : 핸드백, 지갑, 손목시계 등 15개

** 유통·판매가격이 가격공개 전에 비해 1.6%인하(한국물가협회, '14.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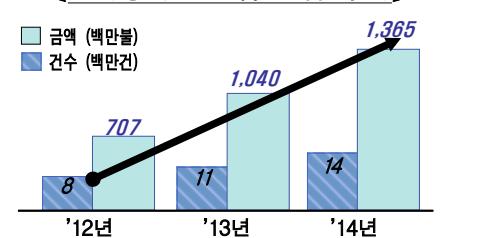
- 원산지둔갑 우려물품의 유통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유통질서 확립

* 신규 : 김치·냉동꽁치(3.1), 식염(11.3), 재지정 : 가리비·돔(8.23), 제외 : 썬그라스, 안경테(3.1)

⑤ 해외직구 등에 대한 통관체제 혁신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하여 전담조직 신설, 첨단검사 장비 확충, 전용물류센터 설치 등 신속·안전한 통관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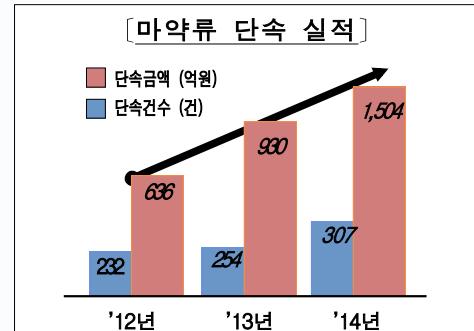
- '내국세 환급(Tax Refund) 절차' 개선*, 해외여행자용 모바일 웹 'Tour-PASS**' 보급 등으로 해외 여행자의 편의 증진

*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건에 대해 세관방문 없이 공항에서 즉시 환급 받도록 세관절차 생략

** 외교부·법무부·검역기관·세관 등 해외여행 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 // 이용인원 1백만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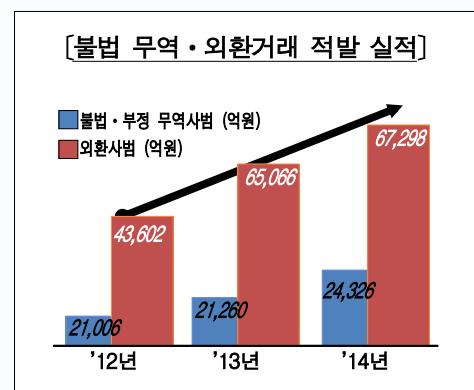
6 국민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공산품·고철 등 국민건강 직결 수입물품(123개 품목)에 대해 세관검사* 등 통관관리 강화
 - 수입식품 검사를 단계별 확대 : 12.7%('14.1~6월) \Rightarrow 16.2%('14.1~12월)
- '마약류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X-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 확충을 통해 총기·마약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방지*
 - 최근 10년 아래 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 단속



7 불법·부정무역 및 국부유출 차단

- 밀수·원산지둔갑·위조상품 등 대외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 불법·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을 엄단*
 - 불법부정무역 단속(억원) : ('13) 21,260 \Rightarrow ('14) 24,326
-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국외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 척결
 - 조세회피처 관련 불법외환거래 단속(억원) : ('13) 12,732 \Rightarrow ('14) 40,328 (전년대비 217%↑)



8 국익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무역·통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노력 경주*
 - '14년 우즈베키스탄 수출 // '15년 카메룬, 콜롬비아, 르완다 수출 가시화
- 관세관·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 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
 - 통관애로 332건 접수, 308건 해소 \Rightarrow 기업비용 400억원 절감
- WTO 무역협정에 위험관리, 통관시간 측정, 통관단일창구 등 우리 관세제도*를 반영함으로써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선도
 - 협정(발효예정 15.7) 반영 : 위험관리·통관소요시간(§7) 및 싱글윈도우(§10)

9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정부3.0 선도

- 국세청과 과세 기초정보 공유(36종) 및 체납 공동정리*, 행자부·국토부 등과 과세정보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효과적 탈세 차단 기반 마련

* 정보공유로 945억원 추징, 1,067억원 체납정리

- 통관단계에서 불량 생활용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검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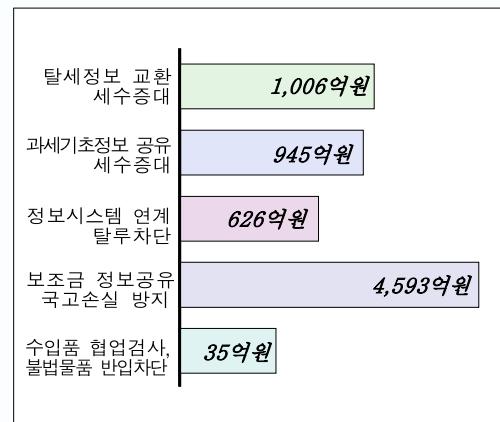
* 납 기준치 초과(유아용 의류) 등 18만개(컨테이너 30대 분량) 적발

** (기대효과) 5년간 사회적 손실비용 약 2.9조원 절감 예상(정부 연구용역, '14.11월)

-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협의체(농림부·해수부·지자체 등 17개 기관) 구축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원산지표시 정상화 추진*

* 원산지위반 단속(억원) : ('13) 3,828억원 ⇒ ('14) 8,665억원 (전년대비 126%↑)

[정부3.0을 통한 관세행정 성과]



2 평가

◆ 관세행정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중소기업 지원 등 국정 과제 및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

- 세계은행(World Bank) 통관환경 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14.10월)
- 국제공항협회(ACI) 국제공항 세관 만족도 평가 9년 연속 세계 1위('14.2월)
-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2회 수상('14.7월, 12월)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14.2월)
- UNI-PASS, 전자정부 세계화 유공 대통령상('14.10월)

◆ 박근혜정부 3年次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정부 핵심정책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



III.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1. 정책추진 여건
2. 정책추진 방향

[1] (대외경제 전망)

-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유로존의 미약한 회복세, 중국경제 둔화 우려, 국제유가 하락 등 불확실성 상존
 - * 세계 GDP 성장률 전망(IMF) : ('14) 3.3% ⇌ ('15) 3.8%
- FTA를 통한 경제블록 가속화, 중국의 기술추격,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 등으로 무역환경 급변 및 글로벌 경쟁 심화
 - * 엔저에 기반한 일본 제조업 재무장, 선진국의 IT 결합형 스마트 제조업 시스템 등

[2] (국내경제 예측)

- 환율상승, 경기부양정책 효과 등 경기회복의 긍정적 요인과 소비·투자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요인 혼재*
 - *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기획재정부) : ('14) 3.4% ⇌ ('15) 3.8%
- 세계경제와 교역 회복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가 예측되나 내수 개선으로 경상수지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 국제수지 전망(기획재정부) : 수출 3.7%↑, 수입 3.2%↑, 경상수지 820억불 흑자

[3] (관세행정 환경)

- 해외직구 등으로 행정 수요자가 기업 외에 개인으로 확대되고 특송화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입 통관환경 급변*
 - * 해외직구: ('08) 2백만건 ⇌ ('14) 16백만건(8배) // 특송: ('08) 8백만건 ⇌ ('14) 22백만건(3배)
-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저가 불량물품 반입, 원산지 둔갑 등 각종 불법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
- FTA를 통해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보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추진 방향

박근혜정부 3年次를 맞아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견인

-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FTA 활용율 제고 등 기업지원을 강화
-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대응한 철저한 세수관리 및 과세 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 불법·부정한 무역 및 외환거래 근절 등 엄정한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보호

중점 추진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 한·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
-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IV.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2. 한·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3.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4.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5.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
6.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7.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 全방위 수출 지원을 통한 역동적 대외경제 구현

-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FTA 활용부터 통관·물류·납세 지원까지 관세행정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수출규모가 크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 및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여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
- 온라인쇼핑 수출(逆직구)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해상배송체계 구축 등 해외 逆직구 확대 기반 조성
 - * B2C몰의 해외주문·판매정보를 관세청 UNI-PASS와 연계하여 편리한 수출신고 가능

□ 면세점의 경쟁력 제고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요우커 등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는 서울·제주지역에 대형 시내면세점을 신설하여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 신규투자 3천억원 및 고용창출 4천6백명, 年 2천억원의 외화획득 효과
- 특허가 만료되는 기존 면세점(서울 4, 인천공항 4, 제주·부산 각 1)의 원활한 후속사업자 선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
- 면세물품의 해외공급 절차 마련*, 관세관을 통한 현지정보 제공과 세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면세점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국내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에 설치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에 판매물품을 직접 공급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및 고용매칭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AEO 공인비용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촉진
 - * '15년 46개 중소수출기업 대상으로 7억 4천만원 지원, '16년까지 150개이상 기업 공인
-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중소기업에게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의 세정 지원을 통해 경영의 조기 정상화 지원

□ 한·중 FTA의 100% 활용 환경 조성

- 전국세관에 「YES-FTA China Center」를 설치·운영*하여 1:1 컨설팅 등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 6대 본부세관 및 24개 일선세관 등 총 30개 세관 83명 배치
- 중국내 주요 거점지역*에 「FTA China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광동(광주), 산동(청도)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지역
-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China-C/O 전담데스크, 전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PASS) 보급 등 원산지증명 부담완화로 FTA 활용 제고

□ China Risk 최소화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發 불량 먹거리·의약품, 마약류, 지재권 위반물품 등 高위험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체계 재정비
- 통관·유통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의 국산둔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 개편 및 위반 단속 강화
- 對중 무역기반 금융범죄의 모니터링 강화, 자본거래와 연계한 가격심사 및 첨단 분석기법 운용 등을 통해 지능형 탈세 방지

□ 新 교역시장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인프라 정비

- 對중 교역의 주요 통로인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FTA 활용형 현장지원 기반 구축
 - * 인천공항·김포·인천·평택 세관이 對중 수입의 83.3% 차지 (건수기준)
- 개성공단제품의 국산 인정, 對중 임가공무역, 북한을 경유한 對중 교역 등에 대비하여 관세행정 제도 및 시스템 재정비

3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 2015년 세수목표 달성

- '15년 세수목표 64.3조원*(잠정)을 차질없이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전체 국세 221.1조원의 29.1% 수준(수입액 5,728억불, 환율 1,030원/\$ 기준)

- 세수변동 요인 분석 및 진도율 상시 점검을 위해 「세수분석 전담팀」을 신설하고 상황별 전략적 세수확보 방안 수립·시행

□ 조세탈루 고위험 분야에 대응 강화

-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강화 및 공동 체납정리 전국 확대

* 고세율 농수산물, 과다환급 업종, 품목분류 허위신고, 다국적 기업 등

- 쌀관세화*에 따른 저가신고에 대비하여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쌀을 통관前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탈세심사 강화

- 명의대여·차용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자료 미제출시 국내판매 가격에 기초한 과세방법 도입 등으로 비정상적 납세환경 정상화

□ 과세품질 및 불복대응 역량 제고

- 과세前 3단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고액(10억원 이상) 추징건은 본청 심의회 사전검토를 제도화

* (1단계) 심사처분심의회 → (2단계) 본청 HS·관세평가심의회 → (3단계) 과세전적부심

-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특별 쟁송팀」을 신설하고 전국 6개 본부세관에 「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 운영

- 국내외 법령정보·과세정보·재결사례 등을 탑재한 통합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과세품질 제고 및 불복대응 기반 조성

□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 차단

-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을 엄단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 구성·운영
-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건강보험급여*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조사 강화
 - * 수출입가격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내역 입수 근거마련(관세법개정, '15.1.1시행)
- 국세청 등 유관부처간 정보공유, 외국세관과 수사공조, 해외거주교민 제보 등 해외진출기업의 불법외환정보 입수채널 다각화

□ 밀수 등 국민생활 밀착형 불법행위 엄단

- 상용물품 분산반입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 및 인터넷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선적·수출까지 전 과정의 관리 강화
- 검사대상 선별 고도화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특송·우편화물로 소량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을 통관단계에서 차단

□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행위 척결

-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시 세액을 경감하고 미신고시 가산세를 중과*하여 자진신고 문화 정착
 - * (자진신고) 세액의 30% 경감, (미신고) 가산세 상향(30% → 40% 또는 60%)
- 특송화물로 반입된 상용물품의 부당 면세통관 및 특송업체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제재 신설
- 바꿔치기 등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적재지 검사체계를 정착하고 중고차 등 우범 수출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토록 개선

5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

□ 불량·위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 원안위·해수부·행자부 등 방사능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에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세관 역할 강화
- 국내외 기관간 정보교류 강화로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글로벌 합동단속*을 주도하여 신종 마약류의 전세계 확산 방지
* WCO와 합동으로 전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종마약 집중단속 및 정보교환(작전명:CATalyst)
- 자동차 부품·소방기기·의료용구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재권 위반물을 선정하여 기획 단속

□ 관세국경 감시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

-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세계 물 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 개최를 위해 종합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대회개요 : (기간) '15.7.3~'15.7.14, (참가국) 170여개국, (선수·임원) 약 20,000명
- 안보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첨단 감시장비 도입 및 X-Ray 판독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공항만 감시역량 강화

□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3.0 협업체계 구축

- 환경부·고용부와 정보공유 및 합동검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석면 등 위해물을 관세국경단계에서 차단
-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내 식품검사 및 위해정보를 수입검사에 활용하여 불법 먹거리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 농관원·수품원·지자체 등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기관간 권역별 협업을 통해 범정부 단속체계 강화

□ UNI-PASS(관세행정시스템) 수출 확대

- 대륙별 거점국가(에콰도르·탄자니아 등)를 중심으로 콜롬비아·카메룬 등 주변국으로 UNI-PASS 수출 확산 추진
- 개도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BPR)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수출 대상국 지속 발굴
- 효율적인 UNI-PASS 수출을 위해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 * WB와 자금지원 협의, IDB 연차총회 및 비즈니스 포럼 대표단 파견 등

□ 국의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추진

- 교역규모, AEO MRA 체결여부, 통관애로 발생빈도 등을 고려한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
 - * (교역규모) 중국, 일본, (AEO MRA 미체결) 인도, 페루, (통관애로 빈번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 국제원산지 콘퍼런스·WCO IT 콘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및 적극 지원을 통해 한국형 관세행정 제도의 국제표준화 추진

□ 글로벌 관세인재 양성 및 국제무대 진출 지원

- 국제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WCO 인증교관·국제훈련교관 등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위험관리·원산지 등 분야별 업무전문가들이 WCO 주요 회의체 및 국제회의 의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 관세행정의 대외영향력 확산 및 국의제고를 위해 WCO 국장급 진출* 등 국제기구에 인적 기여 확대
 - * '15.6월 WCO 총회시 3개 국장(관세무역국장, 조사통관국장, 능력배양국장) 선출예정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세행정 개혁

-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및 규제지도(Regulatory Map)* 작성 등을 통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관세행정 규제개혁 추진 프로세스 마련
 - * 중요도, 순응도를 기준으로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제거를 위한 「2015 관세행정 정상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관세행정 내외부의 적폐(積弊)를 일소
- 정책의 결정·집행시 국민의견 수렴을 필수화하고 타부처·민간과 협업 성공사례 확대 등 정부3.0 내재화로 '열린 관세청' 구현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新 조직문화 조성

- '4P* Up 캠페인'을 전개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 원활한 의사소통, 창의적 업무수행 등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
 - * 4P : Pride(자긍심), Process(효율성), Professionality(전문성), Place(근무환경)
- 업무 적법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잔존 부조리·무사안일에 대한 無관용 등을 통해 적극 행정과 청렴 세관을 실현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성공적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對民 포털(MYC*)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통관 체계 등 세계 최첨단의 지능형 관세행정시스템 구현
 - * MYC(My Customs) : 고객 유형·Needs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업무포털
- 4세대 기반의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업무사각 해소와 다수영역에 걸친 복합위험 대응기반 조성
 - * 통관·심사·조사·FTA 등 관세행정 영역별 업무자료 및 위험정보 등을 상호 공유·활용
- '4세대 국종망 구축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정비, 시범 운영, 대내외 홍보·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전환 추진

관세청 全 직원은

- ◇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가
우리 기업들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FTA 및 AEO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 ◇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 ◇ 관세국경에서
불법·부정 무역 및 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하여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중심·국민 우선의
World Best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